

지역격차로 인해 부산 청년이 겪는 불평등

부산청년 김지현

지역사회가 호명하는 청년이라는 연표

부산과 청년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언론이, 지역사회가 청년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웬만큼 확인할 수 있다. 탈부산, 청년인구 유출, 산학협력, 저출생, 고령화라는 단어들이 들어간 최근 기사들이 보인다. 부산에서 청년은 일종의 자원으로, 인구 재생산의 주체로, 지역산업 인력으로 호명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이 다르진 않다.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지역들이 청년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여겨왔고,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언제부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가 되었을까.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아지다가 2017년 이후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전환되었다.(민성희, 배인성, 2021) 부산에서 지방소멸이 이슈가 된 것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2014년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지방소멸의 원인을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으로 지적한다. 수도권에 청년 인구가 집중되지만 대도시권역의 인구 재생산력이 저하되어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전체 인구재생산에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전체 인구수 유지를 위해 인구 재생산력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방의 청년인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청년이 정주하여 재생산 할 수 있는 정책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2년 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지방소멸 위험지도'가 발표됐다. 여기서 호명된 소멸위험지역들에서 이 내용이 화제가 되어 지방소멸 담론이 확산되었다. 역대 정부는 지역격차,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수립했으나, 혁신도시는 쇠락했고 수도권 공화국의 위치는 더욱 단단해졌다. 당연한 결과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역격차로 인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사유 중 '교육'으로 인한 이동은 15~24세 '직업'으로 인한 이동은 25~3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청년 코호트는 서울권 대학 합격생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는 장면이 익숙하고,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청년 인구가 '교육'과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산 청년이 지역격차로 인해 겪는 불평등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역격차로 인해 겪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과 부산일보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부산시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62%가 '타 지역 이주 의향'이 없었고, 77.8%가 향후 희망 근무 지역으로 부산을 꼽았다. 부산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지역문화 및 생활환경(58.5%), 인간관계(25%), 자연환경(4.1%) 등을 꼽았다. 부산 외에 다른 시·도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산 청년은 37.4%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이주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산 내 '일자리 부족'(45.8%), 다음으로 이직준비(15.1%), 문화여가시설 부족(13.2%), 자기계발 가능성(10.9%), 주거비 부담(7.0%) 등을 꼽았다.

부산 내에서 근무하길 원하지만 수도권을 희망 근무 지역으로 선택한 청년은 14.8%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도시·문화시설이 3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34세(56.2%)가 다른 연령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연봉(20.5%), 발전 가능성(15.6%), 직종 다양성(15.3%), 기업 복지(6.1%), 이직 가능성(3.4%)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가장 높은 비율이 연봉으로 나왔지만, 절반 이상이 희망 연봉으로 4000만 원 미만을 선택했다. 3000만~4000만 원 미만이 35.5%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3000만 원 미만(19.4%) △4000만~5000만 원 미만(18.1%) 등의 순이다. 6000만 원 이상 고연봉 희망자는 14.1%에 불과했다.(부산일보. 부산청년 미래보고서)

부산시 청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6만원으로 8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서울특별시(244만원)와는 38만원이 차이가 난다. 연령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만15세~19세 105만원, 만20~24세는 142만원, 만25~29세는 213만원, 만30세~34세는 242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다.(2020년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부산노동권인센터) 부산 청년들 절반 이상이 희망하는 연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부산시 청년 인식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임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발전 가능성, 직종 다양성, 기업 복지, 성장과 학습의 기회 등 청년에게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부산시 청년정책은 청년 이행기에 일어나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부산시는 이러한 부산 청년이 겪는 일자리 격차를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청년의 삶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 합의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었던 부산시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방향에 맞춰 2021년 청년정책의 분야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총 5개 분야로 조정했다. 총 71개의 청년정책 사업 중 일자리 분야의 사업은 19개로, 예산은 53.8%다.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구직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 지원(1,000명), 청년 두드림 센터 운영, 취업 정장대여(6,800명),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총 70개 사업 1,933명) 등 △창업 및 해외취업 지원 청년 해외취업 박람회,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20명), 기술창업 인큐베이팅(100개사),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조성 등이 있다.

사업 내용에 '정착' 혹은 '정주'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10명), 청년 어촌 정착지원(4명), △주거 분야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3,000명) △교육 분야에서 NEXT10 (부산청년 사관학교) 운영(160명)이 있다. 전국 청년정책의 경향을 살펴보면 지역정착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사업은 주로 도·군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발제에서는 일자리 격차를 겪는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청년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디딤돌카드'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산시 청년정책 중 대표적인 직접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외에 대부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산업, 기업 중심의 청년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청년 지원 정책이 다수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실한 구조에 대한 청년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약 10년 간 대학중심, 산업중심, 기업중심의 청년정책이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고성장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살리기를 목표로, 청년을 인구수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청년 살리기'의 관점으로

지난 4월 3일 MBC에서 기획한 '코로나 시대의 K청년' 마지막 편이 방영됐다. 영상에 인터뷰이로 나온 한 청년은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2030세대는 이런 세상에 내 자식이 나 같은 경험할까봐, 불행할까봐 안 낳는거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데 인구소멸이 위기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청년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부산은 청년에게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서, 지역사회의 역군으로 호명하고 있다. 부산을 살리기를 위해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친다면, 해당 정책에 청년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지역격차와 지방소멸을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이다.